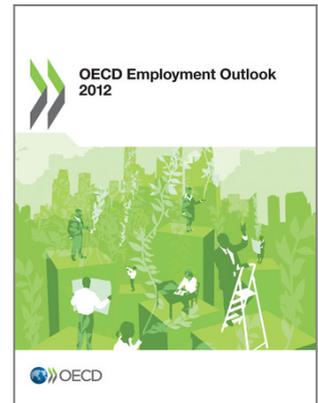


OECD *Multilingual Summaries*  
OECD Employment Outlook 2012  
Summary in Korean



Read the full book on:  
[10.1787/empl\\_outlook-2012-en](http://10.1787/empl_outlook-2012-en)

## 2012 년 OECD 고용전망

### 국어 개요

- 제 30 차 OECD 고용전망 보고서에서는 OECD 국가의 최근 고용시장 동향과 단기 전망을 살핀다. 최근 경제금융위기로부터 회복은 더디고 고르지 못하게 진행됐음이 나타난다. 많은 국가에서 실업률이 용인되지 못할 정도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장기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고실업의 추세가 굳혀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 노동시장이 경제 쇼크를 어떻게 헤쳐 나가는지를 분석한 결과, 구조적 실업 감축을 위한 정책이 경제침체가 실업과 소득 손실,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세계화와 기술 변화의 결과로 많은 OECD 국가에 일어나고 있는 국민소득 대비 노동 비중의 하락이 본고에서 설명되고 있다. 교육 투자 강화와 세제 개선, 이전 프로그램은 경제 성장의 결실이 더 광범위하게 공유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기상변화 완화를 위한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몇몇 부문에서는 대폭의 고용 변화를 겪을 수 있는 반면 총고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수 있다. 다른 구조적 충격과 마찬가지로 노동 시장 이동을 촉진키 위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 경제위기 이후의 OECD 노동시장

OECD 국가 전체 실업률은 전후 최고치인 8.5%를 약간 밑돈 수준인데 내년까지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실업 상태인 인구가 약 4,800 만 명인데 2007 년 말, 금융 위기가 시작되었을 때보다 1,450 만 명 늘어난 수준이다. 거의 3 년 전, 경기 회복이 시작되면서 이뤄진 경제 성장은 OECD 전체 실업의 순환적 증가를 소폭 줄이는 것 이상을 이루기에는 너무 미약하고 불균형한 수준이었다.

동시에 실업과 경제침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에서 국가 간에 대폭의 차이가 드러났다. 호주, 오스트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9 개 OECD 국가들은 실업률이 5.5%를 밑돈 수준이었던 반면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등 9 개 국가들은 여전히 두 자릿수를 보였다.

취약한 경기 회복은 많은 국가에서 실업인구의 소외 심화로 이어졌다. OECD 전체 실업자가운데 1 년 이상 실업 또는 구직 상태인 장기 실업자는 3 분의 1 을 상회한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에서 벗어난 구직단념자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 그리고 몇몇 국가의 청년 실업은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는데 그리스와 스페인은 50%를 웃돈 수준이었다. 반면 독일은 8%에 불과했다.

일자리를 못 구하는 개인과 그 가족의 삶에 바로 피해가 미친다는 점 외에도 실업증가가 최악이었던 국가들은 고실업률이 지속되면서 경기순환적 실업 증가가 구조적 실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미래 노동 공급을 줄이고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 회복조치 저해할 위험을 갖고 있다.

## 실업 해소를 위한 적극적 정책

정책 당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단기에는 최소한 4 개 분야에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즉 일자리 창출을 전체적으로 촉진하고 늘어나는 장기 실업 문제를 해소하며 청년층의 고용 전망을 개선하면서, 경제활동인구에서 영원히 제외되는 실업자가 가능한 덜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에는 노동시장의 내성을 키워 제한된 사회 비용으로 미래 경제침체를 헤쳐 나갈 능력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노동시장 회복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주로 좌우되는데 그러기에는 특히 유로 지역에 불확실 요인이 상당히 있다.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OECD 국가 대부분이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이루는 데 제약을 받는 만큼 제품시장과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에 더 주력하는 것이 경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늘어나는 구조적 실업의 위협에 맞서 적극적 노동정책을 잘 설계하여 실업자들이 가능한 빨리 재취업하고 장기실업 위협에 처한 인구가 임시직 취업 기회를 통해 직업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대일 면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취업동아리 등의 구직 지원과 선택적인 고용 보조금 등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이는 방법들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처방도 될 수 있는데 고용주가 공식 인원을 증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장기간의 실업으로 직업기술이 쓸모없어지게 된 실업자들의 구직을 방해하는 구조적 장애 요인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한 초기에 부족한 기술을 알아보고 실업자 중 부적절한 기술을 가진 특정 집단을 식별하여 이들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 훈련과 직장체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적극적 정책에 활용될 재원이 충분히 마련된 것일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지출 증대가 과거 불황기보다 훨씬 큰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자 1 인당 투입되는 재원 규모를 유지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당국들이 추가 투자가 비용 효과적이라는 점에 확신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인 지 모른다. 또한 사례관리자를 신속히 채용하여 훈련시키고, 품질을 유지하면서 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보여주는 것인지는도 모른다.

많은 국가에서 재정 건전화 압박으로 인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사용될 재원이 더 줄어들 위험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은 어려운 노동시장 여건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현명치 못한 조치일 수 있다.

## 노동시장 내성

불황이 OECD 국가의 노동 소득과 수입 불공평, 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마다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주로 각국 정책과 제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 분명하다. 노동시장에 대한 경기침체의 영향을 완화하고 소득 감축으로 가계가 받는 타격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의 내성을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제혜택은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비용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내성을 강화하는 정책과 제도는 노동시장에 우수한 구조적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일반적으로 구조적 실업이 낮은 국가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 증가를 덜 경험한다. 이는 2006년 OECD 일자리 전략 재평가에서 제시되었던 노동시장의 우수한 구조적 결과를 이루기 위한 다수의 권고사항들이 노동시장의 내성 강화에 기여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공동 임금교섭을 위한 제도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과와 노동시장의 내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엄격한 고용 보호 조항, 임시 계약직의 집중적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는 노동시장의 내성을 낮춘다.

## 소득과 녹색 성장에서 노동 비중

노동시장에 대해 장기적으로 우려되는 2개 사항이 정책당국에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임금과 급여, 수당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감소했다. 경제 위기로 가려졌지만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두 번째 사안은 “녹색 성장”을 달성하는 방법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노동시장에 갖는 의미이다.

국민소득에서 줄어드는 노동 비중이 주로 나타내는 것은 국내 경쟁과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 특히 단순 업무와 관련된 일부 직종의 근로자를 기계로 대체함으로써 저숙련 근로자와 저학력자의 위치가 나빠진다는 점이다.

줄어드는 노동 비중에 맞서 정책 대응을 취해야 되는가? 기술 진보와 세계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실행 가능한 대안이 못 된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자들이 소위 “기계와의 경주”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하도록 할 수 있다. 인적 자본 투자를 늘리고 학교에서 배운 기술과 고용주들이 찾는 기술이 잘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노동 비중 감소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책당국은 경기회복세가 굳혀지면 저탄소 경제와 자원효율적 경제로의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올바른 전환을 하는 과제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은 구조적 경제 변화를 이끄는 최상의 동력으로 간주되는데 여기서 교육정책과 기술정책을 포함한 노동시장정책은 근로자와 고용주들이 필요한 조정을 하도록 도우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OECD 일자리 전략 재평가에서 명시된 정책은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틀을 제공한다.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이러한 일반적인 정책을 도입하면서 “친환경 혁신” 지원과 녹색기술 확산에 초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치게 엄격한 고용 보호와 제품시장 규제가 혁신 인센티브를 꺾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교육과 직업훈련을 개선하는 일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http://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mailto: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http://www.oecd.org/rights)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Read the complete English version on OECD iLibrary !**

OECD (2012), *OECD Employment Outlook 2012*, OECD Publishing.

doi: 10.1787/empl\_outlook-2012-en